

원전센터 공모 로드맵의 덧, '예비 신청'

주 승 환

고려공업검사(주) 연구소장 · 공학박사

정부가 금년 2월 5일 재공고했던 「원전센터」 공모 로드맵은 3단계로 짜여 있었다. 그들 중, 제2단계 시한은 지난 9월 15일 자정까지 마감됐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1단계(지난 5월 31일 마감)에서 청원했던 10개 지역을 각각 다스리는 지자체장들(다른 지자체장들도 소속된 지자체 의회를 거쳐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아니하고라도 신청이 가능)은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예비 신청'을 기간 안에 하도록 짜져 있었다.

하지만 마감된 다음 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그 기간까지 어느 한 곳도 예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1). 정부의 원전센터 공모 절차 중, 제2단계의 길을 가로막은 숨은 덧이 있었다.

이 글은 그 덧이 무엇이었을까를 나름대로 살펴본 내용을 담았다. 당연히 필자의 소견에서 바라본 몇 가지 까닭들임을 인정한다. 이들은 두 가지 가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추진 절차와 직접 관계없던, 예상치 못했던 로드맵 밖의 사회 돌발 사태들인, 4 가지 변수들이다. 돌발 변수들은 '공론화 기구' (2), 한국의 핵실험 IAEA 사찰(3), 러시아의 인질극(4), 그리고 북한의 대규모 폭발 사건(5)들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닥의 변수는 아주 단순한 모사재인의 실수로 여겨질, 행정 절차 안에 '가중한 개인 부담'

을 준 요소라고 생각된다. 청원한 지역의 지자체장들은 원전센터 유치의 책임을 홀로 지게 짜진 로드맵의 한 틈새(6)를 빌미로 신청을 기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로 더 많은 사연들이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을 것임도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의 '새-대책'에는 위의 가닥들을 고려하여 빈틈없이 짜져야 할 것이다.

국민 정서 그리고 돌발 사건들

'공포증' (7)이란 인체의 병리적 한 증상이다. 개인에 따라 그 증상의 차도는 아주 크게 벌어진다. 그런 증상은 타고난 개인의 흑심의 하나인 공포심에 뿌리가 뻗어 있다. 공포심의 특징은 우리 마음 속에 잠잠하다가 일이 생기면 돌발해서 상승 작용을 한다. 공포롭게도 대혼란을 준, 사회적 이슈였던 위의 사건들은 '예비 신청 일정'에 때맞춰 일어났다. 필자일지라도, '자라 보고 놀란 놈이 솔뚜껑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쓰기 싫은 필자 주변 얘기일지 모르지만, 공포증의 한 예를 든다. 2년 전, 우리 집에 침입한 한 강도가 있었다. 온몸이 단단한 끈에 묶여지고 예리한 칼날 앞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오로지 살길만을 찾던,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식구가 있다. 아직도 그녀는 초인종 소리만 나도 겁에 질리고 놀랄 만큼 안쓰럽게도 생활의 리듬을 잃어버렸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도 없다. 범인은 현장 부근에서 잡혔지만, 알고 보니 그도 나름대로 딱한 사정이 있는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 장애자였다.

식구는 제 발로 법원을 찾아가 재판관에게 범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썼던 적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막연히 알려진 헛소리인 원전센터 폭발 위험성의 공포는 아직도 원자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 의식 속에 흑심으로 숨어 있다. 20여 년 동안 '반핵국민연대'란 반핵 단체(反核團體)들은 원전을 하나의 핵폭탄 제조 공장인 '핵시설'이라고 국민들에게 헛소리들을 해온 잔재일 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원전은 태생부터 원자력을 인류 평화의 한 상징물로 만들어졌던 거였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량 살상 무기로서 핵폭탄을 썼던 미국은 전 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가 유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했고, 뒤이어 유엔의 핵심 기구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직돼 지금도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 목적에만 쓰도록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반핵국민연대'는 '원자력'이란 낱말보다는, 걸핏하면 핵폭탄을 줄인 '핵...'을 붙여 모든 관련 이슈들을 묘사한다. 저들의 주장(8)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인성(人性)의 하나인 사람 마음 속에 숨겨진 공포 심리를 극대화시킨 내용들로 도배질하고 있다(9).

일부이긴 할지라도, 그러한 국민 정서의 바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센터'의 이미지는 '핵 센터'의 이미지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해당 주민들에게도 또 다른 '핵 시설'이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핵폭탄의, 방사선의, 보통 교통 사고의, 또는 위의 인질 공포든, 수없이 많은 경우들에서 개별 공포는 사람의 흑심에 뿌리박고 있어,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우리 의식 속에 잠재된 한도 끝도 없는 시한 폭탄들이다.

이런 까닭들이 배경으로 작용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의 도깨비로서 '원전센터'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란 공포를 안고 있다. 이런 가닥 하나만으로도 예비 신청이 쉽게 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책임론'

그 로드맵의 제2단계는 지자체장에게는 너무도 과중한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담을 줄 요구를 하고 있다. 위 글의 설명처럼 국민적 정서가 아직도 바닥일 터인데, 혐오 시설로 알려진 원전센터를 자기 관할 지구에 세울 책임을 모두 혼자 떠안게 된다(10)는 '책임론'이다. 이런 발상으로 된 만사의 전제는 아주 잘못이다. 기존의 원전센터 제2단계 '예비 신청'은 그런 뉘앙스를 듬뿍 풍겨댄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은 개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줄 행정 행위의 강요 조항이 포함되면 성공할 수 없다. 정책 사업은 어디까지나 윈윈 전략(국가, 주민들 그리고 개인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의 바탕에서만 성공한다.

혐오 시설은 내가 참고 견뎌낸다면 그뿐이다. 내 틀 안에 내가 놓겠는데 해당 지구 밖의 어느 누구도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짓은 불필요한 간섭이다. 우리의 44개나 될 반핵국민연대 환경 관련 단체(11)들이 공동으로 가세하여 참견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정치적인 흥정 대상(공론화 기구)도 아니다. 해당 주민들이 법으로 정해진 주민투표법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뿐이다. 제발 그대로 내버려둬라! 법에 의하지 않을 경우 참견해도 때늦지 않다.

일본에는 전범들의 신주들을 모아둔 '야스쿠니'란 한 사당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우리 가족들에겐 그 시설 자체가 눈의 가시처럼 공동의 한 혐오 시설로 비춰질 수도 있다. 원전센터가 무슨 국민들의 정서에 먹칠할 상징적 시설이라도 되는지 왜 그들은 국민적인 저항이라 소리를 높이면서 원전센터 건립에 대항하려 하는가? 무슨 똥판지같이 그에 따를 전리품이라도 챙길 속셈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새로 짚 정부 '대책'에 바람

언론에서는 이번 일에 대하여 이희범 산자부 장관의 발표를 짧게 전했다. "10월 중에 대책을 내놓겠다"(12). 필자는 새로 나올 대책이 어떨지 아직 전혀 감이 잡히질

않는다. 몇 가지 추리들은 산자부 출입 기자들의 기사나 전문에서 들려온다. “先투표 後신청” (13), “공론화 기구 참여를 통해” (14), 그리고 “중-저준위 먼저 찾고 고준 위용 차후 논의” (15)들이 우선 눈에 잡히는 이슈들이 다.

이들 모두는 공고된 기존 로드맵의 근간을 아주 달리 바꾼 내용들이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공고 내용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위의 ‘책임론’을 좀더 구체화시켜 어떤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을 ‘행정 기교’가 필요할 것이다. 원전센터를 자기 지역에 유치한 책임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하나인 주민 투표로써 확정시킨다면, 당연히 그들이 공동으로 저야 할 일로 보여진다 (10). 외부의 간섭은 저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므로 침묵하고 있어야 한다. “내 뜰 안에 놓겠다.”는 정서를 다잡아 갈 정책이래야 성공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윈윈 전략이다.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행정 절차의 보조적인 통과 의례 정도로써 그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한 장치가 새로 짚 대책에 포함되길 바란다.

필자의 한 코멘트

한 지방 신문이 전하는 기사(16)에는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새-대책’에 포함시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었다. 필자는 그 기사를 <울진21닷컴(www.ulji21.com/독자게시판)>에서 읽고 거기에 답글을 올린 적이 있다. 지적된 몇몇 문제점들 중에서 앞으로 정부가

짚 새로운 대책에서 고려할 사족을 덧붙인 부분을 여기에 소개한다.

《— 마지막으로, 왜 처분할 저·중준위 원전 폐기물과 태운 원전 연료를 따로 떼어 보관할 구실을 찾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 설계된 전문가의 구도는 잘못이 없다. 왜 관계 공무원 임의로 전문가의 작품에 덧칠을 하려고 덤비는가? 물론, 두 개의 처분 대상들은 성격상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양쪽은 처분 대상이란 공통점을 갖는다. 한번 처분을 시킨다면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한다. 한쪽은 영구 처분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회수해야 될 자원도 들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원을 분리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철저히 보관 관리만 해야 할 뿐이다.

— 사실 알고 보면, 급한 처분 대상은 태운 원전 연료 봉들일 것이다. 원전 안에 그토록 오래 동안 임시 보관할 대상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들의 관리는 발전에서 조업은 아니다. 부업일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발전 활동에 큰 짐이나 다름없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안전하게 보관 관리가 된다. 마치 연탄 보일러에서 태운 연탄 재를 보일러 주변에 여기저기 쌓아놓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들은 보일러 작업을 방해할 뿐이다. 원전의 안전 운전을 바라면서 불필요하게 신경쓸 재를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은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참고 자료>

1. 장세정, “원전센터 신청 1곳도 안해”, 중앙일보 2004년 9월 16일, 8쪽
2. 공용식, 박 용, “원전센터 선정 ‘울스톱’ 위기”, 동아일보 2004년 9월 14일, A29쪽
3. 박신희, 심재우, “우라늄 0.2g 농축했다”, 중앙일보 2004년 9월 3일, 1쪽
4. 유철중, “러시아 초등학교 인질극 사태”, 중앙일보 2004년 9월 3일, 15쪽
5. 채병진, “북한 창건 기념일 전날 무슨 일일”, 중앙일보 2004년 9월 13일, 3쪽
6. 주승환, “謀事在人, 成事在天”, 원자력산업 2004년 8월호, 43 쪽
7. 주승환, “공포심 그리고 원자력”, 원자력산업 2003년 4월, 38-44쪽
8. Freeman, “핵발전소-핵폐기장 Q&A!!!”, 울진신문 홈페이지, No 218, 04/08/04
9. 주승환, 방사선<Q&A>허구”, 울진신문 홈페이지, 2004/08/15
10. 주승환, “이회법 산업자원부 장관답게”, 편지, 2004년 9월 20일 발송
11. 이정호, “수년내 에너지대란 불보듯”, 한국경제 2004년 9월 17일, 1쪽
12. 장세정, “앞뒤 안맞는 산자부”, 중앙일보 2004년 9월 18일, 4쪽
13. 김경운, “先투표, 後신청” 추진”, 서울신문 2004년 9월 20일, 12쪽
14. 장세정, “19년 표류 원전센터 또 원점”, 중앙일보 2004년 9월 17일, 2쪽
15. 고주희, “방폐장 원전센터 분리 건설 추진”, 울진신문 홈페이지, No. 90329, 9/21.
16. 박기홍, “원전센터 6개 부처장관회의”, 전북도민일보(울진 21닷컴 펴),